

‘메콩강 개발’ 국내기업 진출 지원 환경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라오스서 메콩강위원회장 만나
수자원 종합개발계획 수립 제안

라오스 메콩강 개발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국내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라오스 현지에 파견한다.

환경부는 오는 26~27일 임삼준 차관이 단장을 맡는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라오스에 파견해 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메콩강 유역 수자원 종합개발, 매립가스 발전 등 녹색산업 시장에 국내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27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시 메콩강위원회 사무국에서 아눌라키티쿰 메콩강위원회 회장을 만나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수자원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제안할 계획이다. 메콩강위원회가 중심 창구로서 유역 국가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메콩강위원회는 메콩강 하류 4개국(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이 메콩협약에 근거해 지난 1995년에 설립한 기구다. 메콩강 유역의 수자원개발, 기후변화대응 등 유역 전반의 개발과 관리, 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임 차관은 2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 위치한 천연자원환경부 청사에서 분감 보라썬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 장관과도 만난다. 국내기업이 라오스 녹색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특히 라오스 비엔티안 매립지에서 한국기업이 추진하는 매립가스 발전 사업과 홍수 대응, 기후적응력 증진을 위한 기후변화협력사업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20조4966억 원의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을 달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목표도 설정한 22조 원, 임기 내 100조 원의 수주·수출 효과도 달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수주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 차관은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해

외사업을 발굴해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녹색산업 22조 원 수주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환경부는 인천 연수구에서 ‘제2차 한-메콩 국제 물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 포럼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메콩강 지역 5개국(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태국·베트남)과 주한미국대사관, 미국국제개발처(USAID) 등 메콩지역 개발협력 기관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 및 신규 프로젝트 발굴 등이 논의됐다. 행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메콩지역 5개국 정부 대표와 대사 등이 참석했다. 당시 정부는 미국과 메콩강 하류 물 문제 해결 및 재해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지난 24일 의료취약지역인 강원권 공단 직영 동해병원을 방문해 비상근무하는 중환자실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긴급의료지원 체계 긴급정비

근로복지공, 비상진료대책본부 설치
인천·안산 등 산재병원 9곳 대상

의사 파업 사태가 이어지자 근로복지공단이 소속 산재병원의 긴급의료지원 체계를 긴급 정비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보건 의료 위기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23일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응급진료가 가능한 9개 직영 산재병원에 긴급 진료체계를 보강했다고 25일 밝혔다.

응급진료가 가능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재병원은 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태백, 동해, 정선 9곳에 소재한다. 공단은 우선 이날 오전 10시 전

국 병원장을 화상으로 연결,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해 현장 대비태세를 확인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 사항을 공유했다. 공단 비상대책본부는 앞으로 1일 단위로 현장 상황을 확인해 대응전략을 시달할 계획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각 병원장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응급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응하고, 연장근무·On-call 대기 등 비상근무체계도 보강할 것을 지시했다.

박 이사장은 앞서 지난주 순천병원을 방문한데 이어 지난 24일 의료취약 지역인 강원권 동해병원을 방문해 주말 비상진료대기 상황을 점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설 명절 체불임금 1167억 청산 ‘역대최대’

고용부, 4주간 체불·청산 지도
작년 570억 대비 두배 이상 증가

올해 설 명절 체불청산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월15일~2월8일까지 4주간 설 명절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 체불임금 1167억원(근로자 1만7908명)을 청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명절 체불임금 570억 원을 청산한 것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실적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고용부는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최근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건설업 체불 청산에 집중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근로감독관은 민간건설현장 600여 개소에 대해 현장지도도를 실시하고, 133억원의 체불임금을 현장에서 즉시 청산했다.

특히, 태연건설이 시공 중인 105개 현장을 긴급 점검, 체불임금 중 63억원(전체 체불액의 96%)을 청산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3번째 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540만 원을 체불하고 수사망을 피해 도피행각을 벌인 건설업자를 끝까지 추적해 구속수사하기도 했다. 또, 편의점 아르바이트 임금 35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소액을 이유로 9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체불임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반드시 법정에 세움으

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임금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부터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실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765억원(1만3658명) 집행됐다. 고용부는 올해 1월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용자 상환기간을 연장(거치 1→2년)해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1등급 냉난방기 설치 소상공인 비용 지원

산업부, 구매비용의 최대 40%

대 480만원이다.

사업장에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 등을 신규 설치하는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구매비용의 최대 40%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한 ‘2024년도 고효율기기·설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3월 25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7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에너지효율 1등급 4개 품목을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입비용의 40%를 지원한다.

품목별 지급 한도는 냉난방기·냉장고 각 160만원, 세탁기·건조기 각 80만원으로, 4개 품목 구매시 지원금은 최

다만,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제조사 문의가 필요하다.

지원금은 올해 1월1일 이후 구매할 경우도 수급 적용되며, 사업은 연말까지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사업 공고문은 26일 한전ON과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 게시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 증빙서류(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기기명판·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기기설치 전경 사진, 구매증빙 등)를 구비해 한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고 관련 내용은 한전 본사(061-345-1550~1554)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경제성 지능 청년에 일경험·취업기회 제공

장애인고용소·청년재단·민센터, 맞손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과 청년재단, 서울시 경제성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민센터)가 3차 협약을 체결, 경제성 지능 청년의 일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이들 3개 기관은 지난 23일 서울시립대학교 휘카페에서 경제성 지능 청년과 가족,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업무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향후 경제성 지능 청년 중 진로탐색을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지원하고, 일역량 강화 훈련과 일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개발원은 적절한 고용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제성 지능 청년을 위해 ‘구직육구진단검사’, ‘장애인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 등을 활용해 진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직업훈련과 일경험을 통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카타르에 ‘K-스마트팜’ 수출 나선다

농식품부, 스마트팜협력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가 카타르 도하에서 지난주 ‘제1차 한-카타르 스마트팜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카타르 정부는 국가식량안보 전략(2018~2023년)을 수립하고,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카타르는 올해 안으로 다음 단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며,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한국을 방문해 혁신밸리 모델과 스마트팜 수출 기업을 둘러볼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력위에서는 카타르 측 농업분야 투자 전문가인 하사드 푸드를 초청해 국내 방문 시 기업 간 비즈니스 포럼 개최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며 “경제실무단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카타르 스마트팜협력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카타르 타미م 국왕 임석하에 개정·체결된 스마트팜 협력 업무협약(MOU)에 근거해 운영되는 국장급 실무위원회이다. 양국 간 스마트농업 분야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다.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앞으로 K-스마트농업 기술이 중동 등 수출 유망국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기업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